

統一情勢分析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2004. 7

김영춘(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요 약>

- 참의원 정원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이 고전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크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민당이 49석, 제1야당인 민주당이 50석을 얻었으며, 공명당은 11석, 공산당은 4석, 사민당은 2석, 무소속은 5석을 각각 확보했음.
 - 한국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백진훈(白眞勳·하쿠 신쿤, 45)씨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음.

- 이번 참의원 선거는 여러 면에서 작년 실시된 중의원 선거(2003.11.9)와 유사한 바, ‘여소야대’ 경향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음.
 - 중의원 선거 시 137석에서 177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확장했던 민주당은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정치세력으로 부각되었음.
 - 자민당은 목표인 단독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공명·보수신당과 3당 연합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 집권 초기 80% 이상이었던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고이즈미 총리의 독선과 정치력 한계, 민의에 합치되지 않는 당의 정책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소신을 명확하게 말하고 북·일 정상회담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독선으로 흐르며 유권자의 실망을 샀음.
 -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된 연금법의 국회 통과 강행(6.5)은 유권자들을 분노케 했음.

-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것도 악재로 작용하였음.
 - 「아사히 신문」은 “11일 선거에서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의 20%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고 보도(7.2)했음.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패배함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4월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선거용 얼굴’로 고이즈미 총리를 지지해온 자민당 내 각 파벌에서 ‘포스트 고이즈미’ 논의가 나오면서 그의 레임덕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음.
- 올해 일본 국내경제는 13년만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이즈미의 개혁은 합격점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인 바, 그는 우정민영화사업, 국민연금법의 재심의 등을 통해 여론을 달래면서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북한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큼.
-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국가목표, 통치형태 등 장기전략 수립을 위해 자민당에 설치하는 「국가전략본부」의 핵심활동이 헌법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고이즈미 총리가 외치는 대외문제 돌파구는 북·일 국교정상화라고 보여지며, 앞으로 1년 내에 수교까지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음.
-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당 내 보수세력들이 납치문제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에 나아갈 수 없다고 견제하

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진, 자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계 일본인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진훈씨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야기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군사적 투명성을 촉구해야 함.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국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함.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토론함.

○북핵과 납치문제 때문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는 어려우나, 우리 정부는 북·일 양국의 수교협상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북·일 수교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음.

- 목 차 -

I. 문제 제기	1
II. 투표결과 분석	2
1. 투표결과	2
2. 결과분석	3
III. 일본의 정국과 대외정책 전망	5
1. 고이즈미 총리의 입지 약화	5
2. 개혁의 후퇴	6
3. 미·일 동맹의 강화	7
4. 조기 대북수교 난망	7
IV. 정책적 고려사항	9

I. 문제 제기

- 제20차 일본 참의원 선거(2004.7.11)에서 집권 자민당이 야당 민주당에 패배했음.
 - 자민당이 역대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기는 1989년 리쿠르트사건 등의 여파로 참패한 이후 15년만의 일임.

- 개표결과에 따르면 교체의석 121석 중 야당인 민주당은 기존의석 38석에서 12석 늘린 50석을 차지했음.
 - 반면 자민당은 기존의석 50석보다 1석 적은 49석, 공명당은 현의석보다 1석 늘린 11석을 각각 얻었음.
 - 자·공 양당의 획득 의석 60석과 비교체 의석 79석을 포함할 경우 연합여당은 139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2석)의 과반수를 넘어섰음.¹⁾

-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의 패배를 “고이즈미 총리의 오만이 부른 패배”라고 평가하였음.
 - 이는 일본 국민들이 그의 포퓰리즘적 정치수법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 민주당은 작년 11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약진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결과를 분석하고 일본의 정국과 대외정책을 전망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1) 일본 참의원은 6년 임기이며 3년마다 절반씩 의원을 교체함.

II. 투표결과 분석

1. 투표결과

- 일본 참의원 선거가 전국 53,291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일제히 실시(7.11)됐음.
-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 ‘기일 전 투표’ 제도²⁾가 실시됐음.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선거 전날까지 16일 동안 약 717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투표율을 7% 가량 높여 ‘기일 전 투표’제도의 효과가 입증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신, 일요일 투표 등 때문에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6.57%로 집계되었음.
- 참의원 정원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이 고전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크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자민당이 49석, 제1야당인 민주당이 50석을 얻었으며, 공명당은 11석, 공산당은 4석, 사민당은 2석, 무소속은 5석을 각각 확보했음.

2) ‘기일 전 투표’란 선거 당일 여행·레저·가정행사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지정된 투표소에 나와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참의원의 교체의석과 전체의석 분포

7월11일 선거교체의석		전체의석
자 민	49	116
민 주	50	70
공 명	11	23
공 산	4	20
사 민	2	5
녹색회의	0	1
기 타	0	0
무소속	5	6
계	121	241(결석1)

- 한국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백진훈(白眞勳·하쿠 신쿤, 45)씨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음.
 - 백씨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로 일본 국적을 취득(2003.1)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음.³⁾

2. 결과분석

- 이번 참의원 선거는 여러 면에서 작년 실시된 중의원 선거(2003.11.9)와 유사한 바, ‘여소야대’ 경향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음.
 - 중의원 선거 시 137석에서 177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확장했던 민주당은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정치세력으로 부각되었음.
 - 자민당은 목표인 단독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공명·보수신당과 3당

3) 니혼(일본)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백씨는 1994년부터 선거 입후보 직전까지 「조선일보」 일본지사장을 지냈음.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유명해졌으며, 특히 일본인 남북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로 단골 출연했었음.

연합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민주당은 자민당의 아성으로 통하는 '1인 선거구'에서도 선전했음.

- 사회당 몰락 이후 최대 야당으로 급성장한 민주당의 약진은 정권 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이 담긴 만큼 다음 총선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신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음.

○집권 초기 80% 이상이었던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고이즈미 총리의 독선과 정치력 한계, 민의에 합치되지 않는 당의 정책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정치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소신을 명확하게 말하고 북·일 정상회담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독선으로 흐르며 유권자의 실망을 샀음.
-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된 연금법의 국회 통과 강행(6.5)은 유권자들을 분노케 했음.
-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것도 악재로 작용하였음.
- 「아사히 신문」은 “11일 선거에서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의 20%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고 보도(7.2)했음.

○이번 선거에서 군소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 등 진보주의 정당들이 의석수를 크게 상실함으로써 자민당과 민주당을 양축으로 한 보수 양당 체제가 확립되었음.

Ⅲ. 일본의 정국과 대외정책 전망

1. 고이즈미 총리의 입지약화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패배함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4월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선거용 얼굴’로 고이즈미 총리를 지지해온 자민당 내 각 파벌에서 ‘포스트 고이즈미’ 논의가 나오면서 그의 레임덕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마땅한 후임자가 없는 데다 고이즈미 이후를 노리는 차기 주자들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고이즈미 총리가 당분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고이즈미 본인도 개표 후 “정권 선택선거는 중의원 선거이며, 사임하지 않겠다”고 말해 자신의 책임문제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음.
 -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오는 9월 당정개편에서 선거 총책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당내 반발을 수습할 것으로 보임.

- 공명당의 의석 없이는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발언권은 강화될 것임.
 - 민주당도 당장 연금법과 자위대 이라크 파견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므로 자민·민주 양당의 세력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

2. 개혁의 후퇴

- 올 들어 일본 국내경제는 13년만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이즈미의 개혁은 합격점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인 바, 그는 우정민영화사업, 국민연금법의 재심의 등을 통해 여론을 달래면서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그가 내세운 개혁 일정표는 2006년 9월까지 정권유지 전략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음.
 - 연금개혁은 올해 말까지, 우정민영화법안 제출은 내년 통상국회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삭감은 내년 말부터, 도로공단 민영화회사 발족도 2005년부터 임.

- 우정민영화사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실행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우정공사는 예금만 230조 엔으로 일본전체 금융기관 예금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경우 이를 떠안아야 하는 은행권 부담이 간단하지 않음.
 - 또 국채발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무성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쉽지 않음.
 - 자민당 내의 '우정족'들이 우정민영화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달래는 것도 쉽지 않음.

-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포스트 고이즈미'를 겨냥한 당내 차기주자들의 경쟁이 표면화되면 각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 미·일 동맹의 강화

- 북한 핵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큼.
 -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국가목표, 통치형태 등 장기전략 수립을 위해 자민당에 설치하는 「국가전략본부」의 핵심활동이 헌법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해 주일 미군기지를 아시아의 ‘허브기지’로 격상시키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적극 협력할 것임.
 - 일본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 자국민 보호와 미군과의 협력방안 등을 규정한 ‘유사(有事)관련 7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2004.5.20)시켰음.
 - 미국 워싱턴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놓고 미·일간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4. 조기 대북수교 난망

- 고이즈미 총리가 외치는 대외문제 돌파구는 북·일 국교정상화라고 보여지며, 앞으로 1년 내에 수교까지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음.
 - 쟁킨스의 일본 귀환문제는 그가 일본에 돌아옴으로써(7.18) 해결 되었으며, 재조사와 별도로 다음 달부터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납치 의혹이 있는 일본인 10인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게 식량 25만 톤을 포함한 70-80억 엔(약 700-80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다음 달에 할 예정임(「아사히신문」, 2004.7.9).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당 내 보수세력들이 납치문제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에 나아갈 수 없다고 견제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IV. 정책적 고려사항

- 최근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진, 자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계 일본인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진훈씨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야기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군사적 투명성을 촉구해야 함.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국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함.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토론함.

- 북핵과 납치문제 때문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는 어려우나, 우리 정부는 북·일 양국의 수교협상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북·일 수교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음.